

청년층 불평등 현황과 과제: 노동시장, 소득 및 자산을 중심으로

Youth Inequality and Its Implications for Policy:
Focusing on the Labor Market, Income and Assets

이주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김태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년 취업난, 청년소득빈곤, 청년주거빈곤 등 청년층을 둘러싼 사회문제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욱 확연히 드러나게 된 현재, '청년'은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중요한 화두이다. 청년층은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고용 상황으로 소득이 낮고, 사회 진출 기간이 짧아 자산 형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청년층 내에서도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2020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청년을 위한 정책적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청년 개개인에게 정책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 내 불평등 양상을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청년층 내 불평등 현황을 노동시장 및 소득, 자산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1. 들어가며

올해 3월에 있을 20대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청년 세대'가 꼽히고 있으며, 대선 후보들의 선거 공약에서 '청년정책'은 중요한 화두이다. 한국 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를 통해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 중앙지 및 주요 방송사만을 기준으로 보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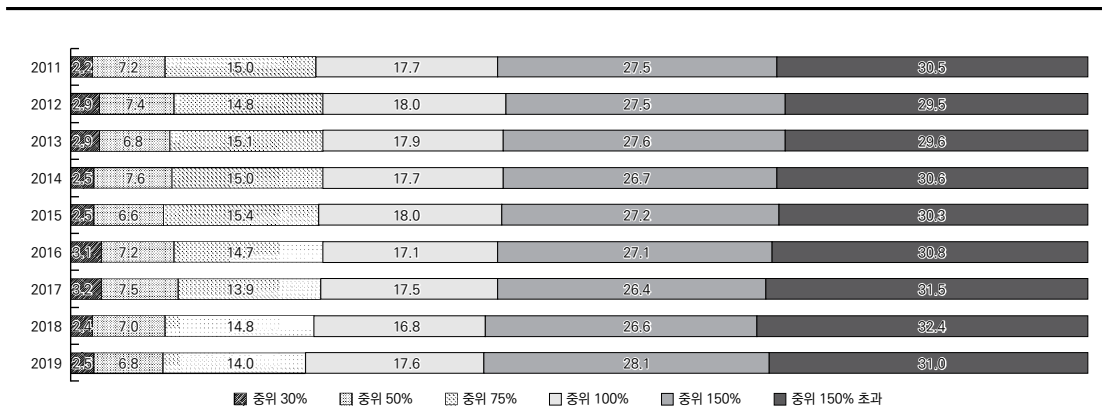
때 2011~2015년 사이 '청년' 관련 기사는 6만 4,234건이었으나 2016~2020년 사이에는 10만 8,931건, 최근 2년(2020~2021년) 사이에는 5만 912건으로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대하였다. 청년 취업난, 청년주거빈곤 증가 등 일자리, 주거와 연결된 사회문제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크게 가시화되기도 했지만, 이와 함께 청년 본인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진 특징도 있

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 시대를 풍자하는 부정적인 신조어의 대상이 사오정, 오륙도 등 중년층에서 이태백, N포 세대, 수저계급론 등 청년층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의 열악한 상황 혹은 청년 내에서 대비되는 모습은 자료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¹⁾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소득 수준별²⁾ 분포를 살펴보면, 청년(만 19~34세) 중 10%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지속적으로 분포하는 반면 30% 이상은 중위소득 150% 이상에 분포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근로 연령층(15~64세) 실업률(3~4%대)에 비해 높은 8~9%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고용률은 일반 근로 연령층의 고용률이 65% 이상인 데 비

해 청년 고용률은 45% 정도로 절반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청년이 현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게 된, 그리고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된 이유는 무엇일까. 청년들은 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게 되었을까. 실업률이 높은 혹은 노동시장 참여가 불안정한 청년층(김태완 외, 2019, p. 168)의 소득 수준은 다른 경제활동 연령층에 비해 열악할 수밖에 없으며, 사회 진출 기간이 짧아 자산 또한 형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청년층 내에서도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향후 청년정책의 핵심 정책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청년 세대 내 불평등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 소득 수준별 청년(만 19~34세)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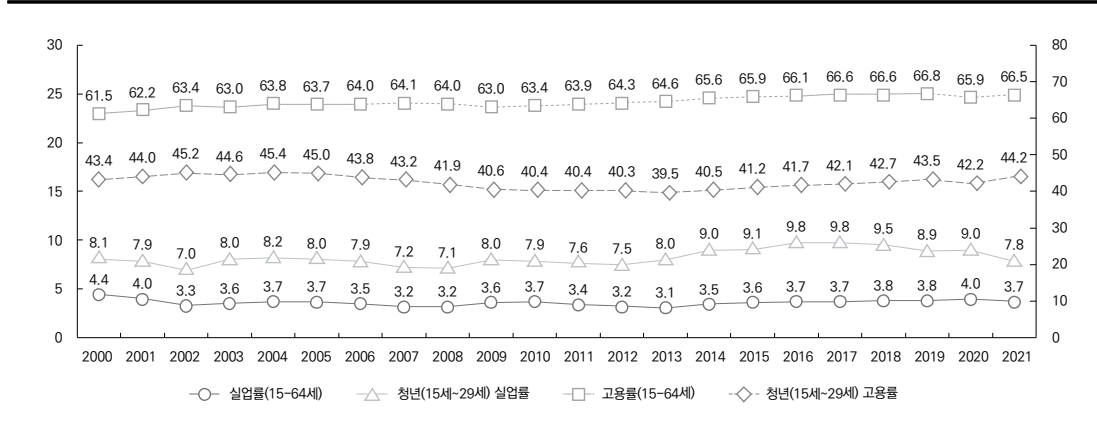
주: (균등화) 경상소득 기준 개인 가중치 적용.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작성.

- 1)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2017년 조사 결과(소득 기준 2016년) 이후부터 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비소비지출은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 자료로 보완하여 작성함으로써 시계열 단절이 불가피하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 2)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 단위 조사로 청년(만 19~34세)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수준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2.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

(단위: %)



주: 청년 연령 기준은 15~29세임.
 자료: e나라지표, 일반 고용동향 및 청년 고용동향.³⁾

따라서 이 글에서는 청년층 내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필자의 분석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만 19~34세로 설정하였으며, 그 외 다른 자료에서 분석된 결과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제시된 청년의 연령이 상이할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2. 청년층 불평등 현황

먼저, 청년층의 노동시장 현황을 살펴보자.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결과, 저임금 청년층 비율은 2019년 기준 9.1%로 청년 취업자 중

10%는 저임금 근로자로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저임금 근로자는 고용 형태별로도 차이를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낮게 나타나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2019년 기준 정규직 중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4.9%인 데 비해 비정규직 중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4.5%로 2015년에 비해 증가한 모습이다. 즉 고용 형태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층 비정규직 비율은 30대에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29세 이하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고용 형태는 국민연금 가입률에도 영향을

3) e나라지표, 일반 고용동향.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4에서 2022. 2. 14. 인출. e나라지표, 청년 고용동향.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5에서 2022. 2. 14. 인출

표 1. 청년 취업자의 고용 형태별 저임금 지표 및 저임금 근로자 비율(통합 표본): 2015~2019년

(단위: 만 원, 명,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중위임금	208.3		216.7		220.0		230.0		250.0	
중위임금의 2/3 값	138.9		144.4		146.7		153.3		166.7	
평균임금	228.3		235.8		241.5		244.7		256.3	
표본 수	3,580		3,630		3,576		3,449		3,571	
전체	5,518,663		5,583,053		5,519,992		5,199,144		5,526,260	
저임금 근로자 비율	494,808 (9.0)		497,172 (8.9)		406,310 (7.4)		524,765 (10.1)		501,952 (9.1)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중위임금	220.0	183.3	230.0	200.0	233.3	200.0	250.0	200.0	250.0	215.0
중위임금의 2/3 값	146.7	122.2	153.3	133.3	155.6	133.3	166.7	133.3	166.7	143.3
표본 수	2,787	871	2,735	958	2,725	960	2,567	1,055	2,846	771
전체	4,212,143	1,306,521	4,148,379	1,434,674	4,031,669	1,488,323	3,657,563	1,541,581	4,356,491	1,169,769
저임금 근로자 비율	228,463 (5.4)	266,346 (20.4)	216,513 (5.2)	280,659 (19.6)	150,030 (3.7)	256,280 (17.2)	210,252 (5.8)	314,513 (20.4)	215,126 (4.9)	286,826 (24.5)

주: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로 청년층의 연령은 20~34세임.
 자료: 황광훈. (2021). 청년층 저임금근로자 노동시장 특성 및 지속성 분석. 고용이슈, 가을호. p. 116. 표 1. p. 119. 표 4.

미친다. 정규직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지난 16년간(2004~2019년) 크게 높아진 반면 비정규직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큰 변화가 없다는 점(정해식, 2020)에서 청년층의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 차이와 함께 사회보험 가입에도 격차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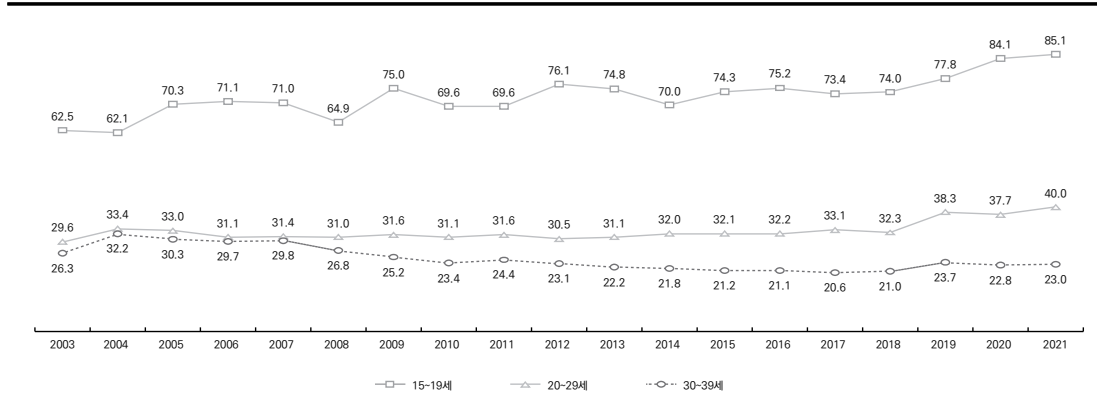
청년 취업자의 저임금 근로 지속성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 대졸 이상 고학력층보다는 고졸 및 전문대졸 학력층, 즉 낮은 학력층에서 저임금 근로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사하고 있는 기업의 규모에 따른 차이도 보이는데,

기업 규모가 클수록 저임금 근로 지속 현상이 감소하며, 소규모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취업자 10명 중 3명은 저임금 근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광훈, 2021). 안정적인 고용 상태의 청년층과 달리 불안정 고용 청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그러한 현실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과 고용 환경 악화로 니트(NEET)⁴⁾ 청년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일을 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직업을 구하더라도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할 확률이 높다(남재량, 2021).

4)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는 학업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를 지칭한다(김기현, 2017).

그림 3. 청년층 비정규직 비율

(단위: %)



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활용 지표.
 자료: e나라지표, 비정규직 고용동향.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477&stts_cd=247702&freq=Y
 에서 2022. 2. 14. 인출.

또한 불안정한 노동 환경은 청년층의 혼인과 출산 기피 현상을 야기하고 이는 저출산과 같은 사회문제를 심화시키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최순중, 2019).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소득 분위 및 자산 분위별 청년 분포를 살펴보면, 소득 1분위에 청년의 11~12%가, 자산 1분위에 청년의 20% 정도가 분포하고 있다. 반면 청년의 25%는 소득 5분위, 그리고 청년의 20% 정도는 자산 5분위에 분포하고 있다. 더욱이 소득 5분위 및 자산 5분위의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폭이지만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청년층 내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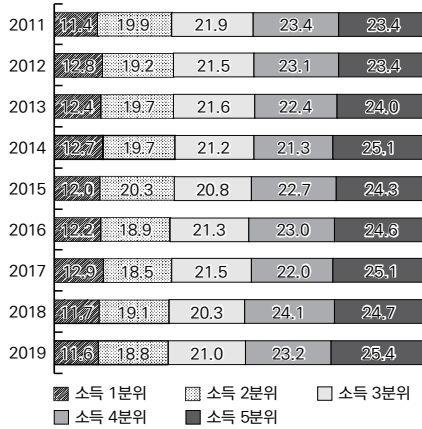
분위별 소득 및 자산 수준을 비교해 보면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소득 1분위 청년의 평균 일차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은 2019년 기준 83만 9천 원인 반면 소득 5분위 청년의 평균 일차소득은 653만 9천 원으로 소득 1분위의 7.8배에 달한다. 다행스럽게도 소득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경상소득의 격차는 6.2배로 다소 감소하지만 그럼에도 청년층 내 소득 격차는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물론 균등화를 하였음에도 가구 단위 조사로 소득 수준이 높은 부모와 소득을 공유함으로써 고분위 청년층의 경제적 역량이 실제 그들의 경제적 역량보다 과대평가 되었을 경향(김문길, 이주미, 2017)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소득을 함께 공유한다는 점에서 저분위와 고분위 청년층의 소득 불평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자산 격차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총자산 기준 자산 1분위의 평균 총자산은 2020년 기준 4

그림 4. 소득 분위별 청년(만 19~34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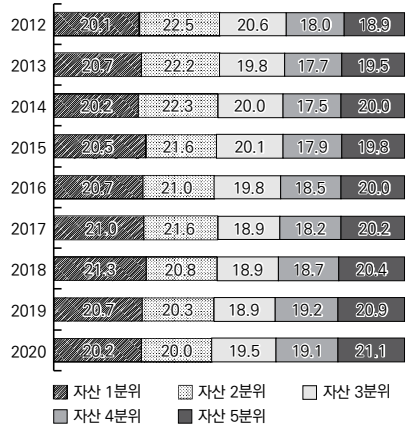
(단위: %)



주: (균등화) 경상소득 기준 개인 가중치 적용.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작성.

그림 5. 자산 분위별 청년(만 19~34세) 분포

(단위: %)



주: 총자산 기준 개인 가중치 적용.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작성.

표 2. 청년층(만 19~34세) 소득 수준(소득 1분위 대 소득 5분위)

(단위: 만 원/월)

년	소득 1분위				소득 5분위			
	일차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경상소득	일차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경상소득
2011	61.1	4.0	5.8	70.9	459.6	1.3	5.5	466.3
2012	65.5	3.5	5.9	75.0	478.9	1.0	6.2	486.1
2013	69.2	3.3	6.5	79.1	503.2	1.0	6.8	511.0
2014	72.6	2.2	7.7	82.5	502.3	0.8	7.2	510.3
2015	73.6	2.9	8.6	85.0	512.1	0.8	8.3	521.2
2016	75.6	3.6	10.9	90.1	598.6	0.9	9.0	608.5
2017	79.2	4.2	11.8	95.2	631.3	1.1	9.0	641.3
2018	84.3	5.2	13.9	103.3	651.7	1.0	8.5	661.2
2019	83.9	4.6	19.4	107.8	653.9	1.5	10.6	665.9

주: (균등화) 경상소득 기준 소득 분위, 개인 가중치 적용.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작성.

천5백만 원 정도이며, 이 중 주택 가격 등이 포함된 부동산이 511만 원 정도이고 자산 종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자산은 3천4백만 원 정도이다. 반면 자산 5분위의 총자산은 14억 8

천만 원이며, 이 중 부동산이 11억 원, 금융자산이 3억 원 수준이다. 또한 자산 1분위에서는 총 자산 대비 부동산 비율이 11.5%인 데 비해 자산 5분위에서는 부동산이 76.5%를 차지하는 등 자

표 3. 청년층(만 19~34세)의 자산 수준(자산 1분위 대 자산 5분위)

(단위: 만 원)

년	자산 1분위					자산 5분위				
	금융자산	부동산	기타 실물자산	총자산	부채	금융자산	부동산	기타 실물자산	총자산	부채
2012	2,324.9	224.4	384.7	2,934.0	884.9	23,321.0	86,176.3	7,105.7	116,603.0	21,645.6
2013	2,477.6	305.7	431.0	3,214.2	971.4	24,632.6	81,534.0	7,738.8	113,905.5	22,097.2
2014	2,760.2	311.9	469.3	3,541.3	1,007.3	24,532.8	81,045.9	8,145.3	113,724.0	21,990.1
2015	2,838.6	343.0	439.8	3,621.3	1,054.5	25,385.9	82,422.9	7,461.0	115,269.8	21,725.0
2016	2,891.6	366.3	497.6	3,755.5	1,080.6	26,317.3	87,514.3	6,723.8	120,555.4	22,907.8
2017	3,070.6	431.2	505.2	4,007.0	1,354.4	28,006.9	87,790.9	6,373.0	122,170.8	23,818.1
2018	3,261.6	533.6	540.7	4,335.8	1,398.0	31,211.9	98,965.6	6,235.1	136,412.6	25,758.2
2019	3,277.2	570.7	517.4	4,365.2	1,610.3	30,122.2	107,692.6	5,725.8	143,540.6	27,218.1
2020	3,415.6	510.6	526.2	4,452.4	1,664.3	29,648.1	113,406.2	5,262.6	148,316.9	28,182.7

주: 균등화하지 않은 총자산[※] 기준 자산 분위, 개인 가중치 적용.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작성.

산 구성비도 대조적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주택시장의 불평등이 청년의 자산 불평등으로 고스란히 전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동산 격차는 청년층 주거 상태의 열

악함으로 나타난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청년 가구가 월세에서 월세로 이동한 비율이 40.9%로 청년 가구 10가구 중 4가구는 월세에서 월세로 주택 점유 상태가

표 4. 청년 가구의 직전주택과 현재주택 점유 형태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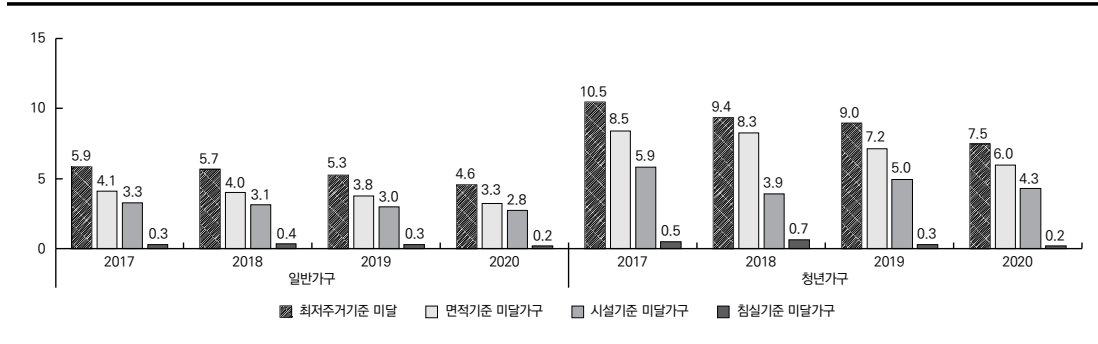
구분	현재 주택						계
	자가	전세	월세	무상	무상	무상	
2018년	직전 주택	자가	3.8	0.8	0.6	0.1	5.3
		전세	11.5	15.4	3.2	0.9	31.1
		월세	2.4	6.6	41.1	1.3	51.4
		무상	1.8	3.3	5.9	1.2	12.2
2019년	직전 주택	자가	2.6	1.3	0.4	0.2	4.6
		전세	9.5	16.4	3.3	1.0	30.2
		월세	2.2	8.9	40.6	1.1	52.9
		무상	2.1	2.7	5.8	1.8	12.4
2020년	직전 주택	자가	2.5	0.6	0.5	0.4	4.1
		전세	9.2	16.0	3.8	0.8	29.7
		월세	2.6	8.9	40.9	1.0	53.2
		무상	1.7	3.3	6.1	1.9	13.0

자료: 강미나 외. (2021). 2020 주거실태조사 - 특성가구 연구보고서. 국토연구원. p. 70. 표 II-35.

5) 일반 가계 자산 관련 연구에서 자산은 가구 내 공공재와 같은 개념으로, 한 가구원이 사용하는 자산이 다른 가구원의 자산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권일, 김미애, 2021, p. 6). 따라서 이 글의 분석에서도 자산은 균등화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그림 6.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단위: %)



자료: 강미나 외. (2021). 2020 주거실태조사 - 특성가구 연구보고서. 국토연구원, p. 35. 그림 II-9.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이다. 청년 가구의 주거 환경이 일반 가구에 비해 열악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20년 기준 일반 가구가 4.6%인 데 비해 청년 가구는 7.5%로, 2017년에 비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일반 가구에 비해서는 높은 비율이다. 면적기준 미달 가구 및 시설기준 미달 가구 비율 또한 일반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3. 청년층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대응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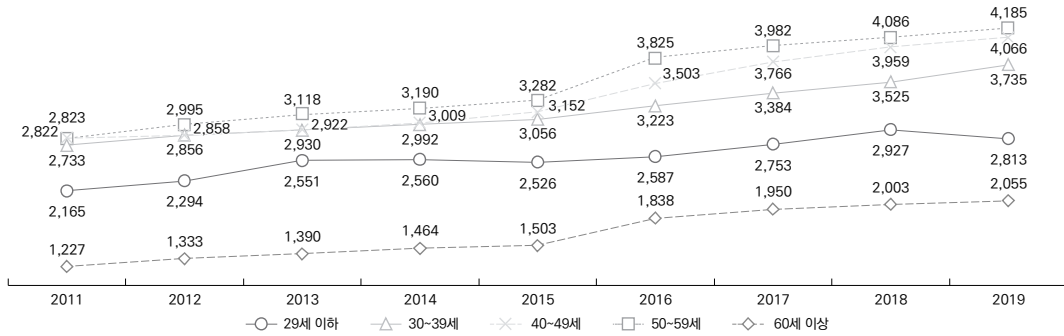
가구주 연령별로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수준을 비교해 보면, 청년층은 경제활동 연령층이 아닌 노년층을 제외하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비교할 때 공적이전소득의 효과는 노년층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가구주 가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의 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제한된 국가 재정과 정책 프

로그램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되었으며, 근로 혹은 노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근로 연령층이 사회보장 정책 대상의 후순위가 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기존에 근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 및 고용보장제도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저소득 근로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만을 대상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근로 연령층이 포함되기 쉽지 않은 구조이다. 근로장려세제 또한 연간 1회(근로자 2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일시적 지원에 불과하다. 김태완 외(2020)에 따르면 2018년 기준만 34세 이하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청년층 중 39.5%가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빈곤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층 소득 지

그림 7. 가구주 연령별 균등화 시장소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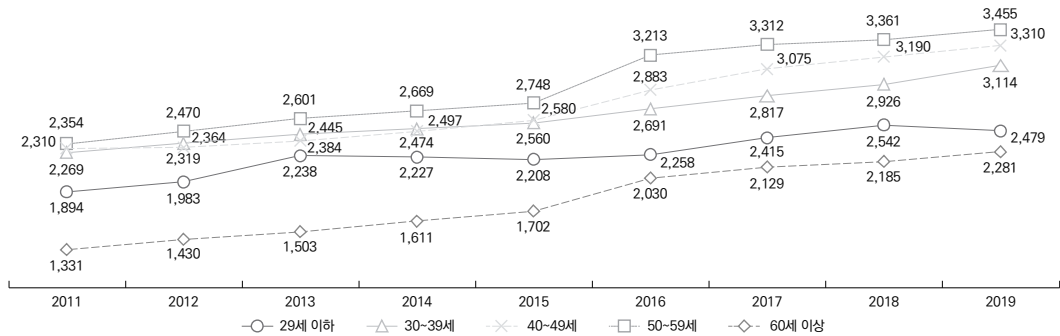
(단위: 만 원/연간)



주: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가구 기준으로 산출.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작성.

그림 8. 가구주 연령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수준

(단위: 만 원/연간)



자료: 김태완, 이주미, 류진아, 강예은, 노법래. (2021). 소득분배 동향 변화 및 정책대응 방향 연구, p. 101.

원을 강화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를 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도입되었지만, 수급 대상과 급여 조건 등이 매우 협소한 한계가 있다.

또 청년 대상 사회수당제도가 서울, 경기, 성남 등

일부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되기도 하였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만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씩 6개월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며, 경기도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형태로 만 24세 청년(3년 이상 거주) 1인

에게 연 100만 원(분기별)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대구에서는 사회진입활동지원금 형태로 대구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만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서비스 지원 형태에 따라 차이를 두고 30만~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 바 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이 선별적으로 혹은 산발적으로 시행되기도 하였지만 청년층의 소득 증대와 같은 불평등 해소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회보장 포괄성 및 적절성에서 격차가 더 눈에 띄게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ILO, 2021, p. 18).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저임금, 비정형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 등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비대칭적 소득 감소를 초래하였고, 이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용 상황 및 저숙련 상태에 있는 청장년층에게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배경으로 기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이 확대 개편되었다. 개편의 골자는 사업의 대상을 수급자·차상위 이하 빈곤 청년 중심에서 차상위 이상의 청년까지 확대 개편하는 방향이었다. 이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개편의 효과성은 추후 평가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층을 위한 정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으로 「청년기본법」 규정을 들 수 있다. 청년 실업률, 저임금 불안정 청년 노동자, 고학력 니트 청년 증가 등 청년층의 열악한 고용 환경은 청년층의 고용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공론화되었다. 이러한 관심과 정책

수요에 대한 대응으로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청년기본법 제1장 제1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0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와 문화, 참여와 권리 등 모든 영역에서의 청년 대상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먼저,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방향으로 일자리 영역의 기본계획을 설정하였으나,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구직과 창업 중심 지원 등은 체감되지 않는 일자리정책에 머물 가능성이 농후하다. 주거 지원 또한 빈곤 청년 대상의 주거급여와 상환 부담이 있는 대출 중심 지원으로 지원 대상에 제한이 있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청년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층 내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특성을 맞추지 못한 복지정책의 한계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본계획이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적 기반이 우선적으로 구축된 것은 분명 굉장한 발전이었다. 그렇다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후 1년이 훌쩍 지난 지금, 청년의 삶은 개선되었을까.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지만 기본계획이 발표된 후에도 청년의 삶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청년 내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효과가 없었다기보다 개별적인 청년정책 이면에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문제-일자리 부족, 부동산 가격 상승 등-가 있기 때문이다(배정희, 2021).

4. 나가며

지금까지 청년층의 불평등 현황과 정책 대응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년층의 고용 상황은 열악하고, 소득과 자산 수준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다. 청년층의 특성은 다양하고 이질적이며, 청년층 내 불평등은 각종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손에 꼽을 정도이며, 앞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제도는 ‘근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라는 점에서 청년빈곤 혹은 청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할 청년층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시행돼 온 청년을 위한 정책들 혹은 청년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들이 청년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청년층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차별금지법 시행, 기업 규모 간 복지·임금 격차 축소 방안이 절실하다. 구직 기간이 길어짐과 동시에 어쩔 수 없이 고스펙이 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단시간에 창출하기는 구조적으로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일자리 질(임금, 복지 혜택 등)의 격차를 최소화해 가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변화의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방향과 동시에 중간 단계로 광주형, 군산형 일자리 등 기존 모델에 대한 평가를 통한 일자리 구축 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년 고용 할당제, 지역 고용 할당제 등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청년 세대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보장제와 같은 정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사회보장 혹은 사회보험 범위에 포괄되지 않는 비정형 근로자, 자영자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또한 고민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존의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로, 청년기(20~39세) 수급자 비율은 10.7%, 총 인구수 대비 1.6%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 2021, p. 24). 이처럼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보장(공공부조) 혜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과 같은 저소득 근로 연령층을 대상으로 강화된 고용 서비스가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소득보장제도를 검토(김태완 외, 2020, pp. 227-234)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일의 함에도 좁혀지지 않는 청년 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장 강화와 함께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필수적인 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가족 내 돌봄 가구의 존재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청년층(소위 영케어러) 등 열악한 상황에 놓인 청년층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돌봄체계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 또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미나, 박미선, 이재춘, 이길제, 이후빈, 조윤지, ..., 이진우. (2021). 2020 주거실태조사 - 특성가구 연구보고서. 국토연구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청년기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B%85%84%EA%B8%B0%EB%B3%B8%EB%B2%95>에서 2022.02.13. 인출
- 권일, 김미애. (2021). 분위별 자산·소득 분포 분석 및 국제비교. 국회예산정책처.
- 김기현. (2017). 한국 청년 니트(NEET)의 정의와 결정요인. KLI 패널 워킹페이퍼 2017년 제8호 No. 8. 한국노동연구원.
- 김문길, 이주미. (2017). 청년 고용 및 빈곤의 국제적 조망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17년 2월호, 20-3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완, 김기태, 정세정, 이주미, 최준영, 강예은, ... 송치호. (2019).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완, 이주미, 정은희, 최옥금, 최유석, 송치호, 박은정, 김보미. (2020). 우리나라 소득분배 진단과 사회보장 재구조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완, 이주미, 류진아, 강예은, 노법래. (2021). 소득분배 동향 변화 및 정책대응 방향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남재량. (2021). COVID-19 충격이 청년 니트(NEET)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2021년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배정희. (2021).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 1년, 청년의 삶과 향후 과제. *복지타임즈*. <http://www.bokjitim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87>에서 2022. 2. 14. 인출.
- 보건복지부. (2021).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 정해식. (2020). 청년의 사회보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0년 6월호, 19-3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순중. (2019). 청년정책의 전망과 방향성에 대한 제언. *청소년학연구*, 26(1), 253-273.
- 황광훈. (2021). 청년층 저임금근로자 노동시장 특성 및 지속성. *고용이슈*, 가을호, 114-119. 한국고용정보원.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ILO. (2021). World Social Protection Report 2020-22 Social protection at the crossroads - in pursuit of a better future.
- e나라지표. 비정규직 고용동향.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477&stts_cd=247702&freq=Y에서 2022. 2. 14. 인출.
- e나라지표. 일반 고용동향.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4에서 2022. 2. 14. 인출.
- e나라지표. 청년 고용동향.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5에서 2022. 2. 14. 인출.

Youth Inequality and Its Implications for Policy: Focusing on the Labor Market, Income and Assets

Ju-mi Lee

Tae-wan Kim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ocial problems surrounding the youth, such as the increased youth unemployment rate, youth income poverty and youth housing poverty, have become more evident due to the impact of COVID-19. Youth have difficulty accumulating assets due to the economic downturn and their unstable employment situations, low income and their being new relatively new to the labor market.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inequality exists even among the youth population. Although policies targeting youth are being implemented, such as the enactment of the Basic Youth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basic youth policy plan for 2020, there is still a high demand for more policies for youth. In order to connect policies to diverse and heterogeneous young individual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attern of inequality within the youth genera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inequality among youth in terms of labor market, income, and assets, and discusses implications for policy.